

2021년 가맹사업 분야 동향

관련 구성원

김 시 주 변호사

T 02.772.2747

E sjk@hmplaw.com

안 영 은 변호사

T 02.772.2742

E yeon@hmplaw.com

김 영 열 변호사

T 02.772.2778

E youngkim@hmplaw.com

이 선 주 변호사

T 02.772.2841

E leesj@hmplaw.com

진 혜 승 변호사

T 02.772.2873

E jinhs@hmplaw.com

최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 11. 19.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사업자로서는 관련 개정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충정은 가맹사업법의 개정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개정 사유]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 방식의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었던 바,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음

[개정 내용] 금번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①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별로 직영점을 1개 이상 +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6조의3 제1항 제3호), ②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 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음 (개정안 제2조 제10호 아목)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①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 있어 ② 등록 신청일 현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직영점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정보공개서 의무 기재사항 추가

-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기대 효과] 금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 방식을 검증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1.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예외

[개정 내용] 개정안의 위임에 따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의 예외 사유 및 임원의 운영기간 합산 요건 (해당 임원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임원일 것)을 구체화 하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구체화함

직영점 운영 의무 예외 사유	정보공개서 의무 기재사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별 운영기간 및 직영점 평균 영업기간, 직영점별 매출액 및 직영점의 평균 매출액 등

2.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개정 사유] 현행법은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개정 내용] 금번 개정안은 ①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②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함 (개정안 제3조 제2항)

* 소규모 가맹본부: ①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②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 (단 가맹점 5개 이상 제외)인 경우 (가맹사업법 제3조 제1항)

[기대 효과] 금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소규모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 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음으로써 합리적 창업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가맹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개정 사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후 사후에 그 비용 집행 내역만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가맹본부와 협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음

[개정 내용] 금번 개정안은 (분리판촉행사 등 일정한 예외 하에)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였음 (개정안 제12조의6 제1항)

[기대 효과] 금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개정 사유] 현행법상 가맹점주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게 거래 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그 협의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맹본부가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요청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개정 내용] 금번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인 절차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개정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요건

개정안 제14조의2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1.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
2.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였을 것

[기대 효과] 금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맹점들이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제공 확대

[개정 사유] 최근 가맹본부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제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가 가맹점주나 가맹점희망자에게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음

[개정 내용] 금번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①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채널별 매출액의 비중과 ② 가맹본부의 전체 취급 상품 중 가맹점 전용상품 및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을 추가함 (개정안 [별표 1] 제6호 바목 1), 2))

[기대 효과] 금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맹점희망자가 온라인 매출액 대비 가맹점 매출액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창업 및 가맹본부 선택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본부의 온·오프라인 영업정책 방향을 가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금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희망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번 개정안이 가맹본부에 대한 여러 의무를 신설하고 있는 만큼,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총정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적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